

주원산오리, 도축장 HACCP인증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기반 확립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오리고기 공급과 오리고기의 새로운 소비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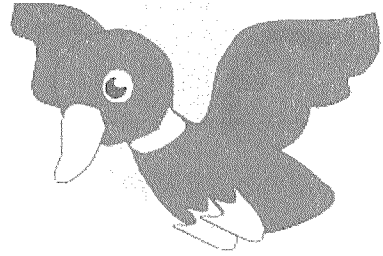
충북진천에 소재한 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 오리도압장이 지난 1월27일부로 충북도로부터 HACCP 작업장으로 인증됐다. 주원산오리 오리 작업장의 HACCP 인증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및 위해요소 관리 기준 마련, HACCP 교육 등 인증을 위한 작업 개시 후 11개월 만이며 인증 신청 기준일로는 4개월만이다.

HACCP 작업장으로 인증된 주원산오리 도압장의 일일 작업능력은 8시간 작업기준 1만5천수의 규모로 오리도축장으로는 3번째로 HACCP 작업장으로 인증되어 위생적인 오리고기 공급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우진 사장은 HACCP 인증으로 대형 유통업체 및 단체급식 등 대형 유통업

체의 관계자들의 오리고기 선호도가 높아져 새로운 오리고기 소비시장이 창출되고 소비자에게는 오리고기에 대한 안전한 건강식으로 인식을 앞당겨 전체 오리고기 시장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주원산오리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은 일반 세균수와 제품 출고 온도를 4도씨에 두고 이를 매일 검사 체크 하여 유통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사육위생관리의 강화 및 작업중 미지션의 효과적인 제거 등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 공급을 통한 소비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오리고기 대일 수출반송, 대책마련 시급

작년 12월 22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 질병발생에 따라 일본정부가 국내산 가금육 수출을 전면 중한 이후 기 수출된 오리고기 반송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월30일 현재 일본으로 수출된 오리고기의 반송물량은 화인코리아 27.89톤, 모란식품 9톤등 총 36.89톤으로 금액상으로는 2억9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태로 수출업체들은 반송된 물량에 대한 수출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반송된 물량은 내수시장과의 규격이 틀려

일부 가슴살 부위를 제외하고 국내 판매가 사실상 힘들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일부 물량이 혼체가공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나 가공물량이 소량인데다 다른 부위는 아예 판로가 없어 반송된 물량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모란식품 관계자는 『수출중단에 따라 수출을 위해 가공된 물량이 그대로 냉동창고에 보관되고 있고 반송된 물량은 내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닭·오리고기 日수출 3월말 재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닭·오리고기 등 국내산 가금육의 대일 수출이 3월말쯤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월26일 한국과 일본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최근 일본에서 가진 회

NEWS

답에서 3월말부터 한국산 가금육의 일본 수출을 재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말 광주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한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를 내리고, 수입을 금지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일본 측이 국내 방역조치 등에 만족감을 보여

반입금지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는 대로 수출을 재개킬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을 재개했으나 광주에서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대일 수출이 중단됐다.

닭 · 오리고기 모니터링 검사 강화... 농림부 의견 수렴중

닭고기 · 오리고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도축장 HACCP전면시행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 검사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개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검사의 권장기준 중 닭고기 · 오리고기에 대한 대장균

수의 권장허용기준을 현행 10^4 (CFU/cm², ml)이하에서 10^3 (CFU/cm², ml)이하로 강화한다.

또 식육중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항목중 살모넬라균수에 대한 검사 및 결과조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 1.14)

공동방제단 정예화 · 소독지원 대상도 확대

올해부터 공동방제단이 정예화됐다.

또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대상도 닭, 오리농가까지 확대 돼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의 날 효과 제고가 기대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농림부의 2005년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수립된 가축방역종합대책'에서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운영되는 마을별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NEWS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방제단을 정예화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 80~100호를 기준으로 1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함으로써 지난해 9,700개반이었던 공동방제단을 올해 3,880개반으로 재편성했다. 1개반별 방제요원수는 당일대상농가 소독이 완료될 수 있도록 3~6명으로 편성했다.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1개반으로 구성, 이들이 다른 축종의 농가를 소독토록 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질병전파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시도 또는 읍면단위 공동방제단 편성이 원칙이나 지리적 또는 방제요원·장비 동원 등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소독 전담업체 위탁 운영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번기에도 원활한 소독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독 지원대상도 올해부터 닭, 오리농가까지 확대됐다. 소, 젖소, 사슴, 염소는 각각 10마리미만, 돼지는 500마리

미만, 닭은 3000마리 미만, 오리는 전농가로 총 31만1000호가 소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그동안 시도별로 성과급이나 정액제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성과급으로 지원토록 했다. 1농가 1회 소독시 2000원이 지원된다. 소독약품은 1농가 1회 소독시 희석액 30ℓ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123억8200만원, 지방비 65억2300만원 등 총 189억5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지원비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30억4600만원, 소독약품 공급비로 58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은 시장·군수, 읍·면장(총괄 시·도지사)이 하고, 소독약품 구매는 농협중앙회(축산건설팅부), 공급은 지역축협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 1월14일)

축산업등록제 조기정착에 모두가 힘 모아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축산업등록제 참여율이 25%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등록시한인 올해 12월까지의 축산농가 대다수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은 축산업등록제다. 그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장위치·사양·방역·가축분뇨 등의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선진축산의 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겠다는 강력한

NEWS

정부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축산농가들은 시기상조라며 서명운동을 펼치며 크게 반발해왔다.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2010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축산업등록제 농가 참여율이 높아진다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축산업등록제 결림돌 중의 하나인 축사의 건폐율을 지역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현행 20% 이하에서 최대 60%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도움이 됐다고 본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여전히 많고 단속 강화와 사육마릿수 강제 감축을 걱정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농가에는 충분한 설득과 지원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축산단체·지자체·정부가 함께 올 한해 동안 역점을 뒀야 할 중요 과제다.

(농민신문 2005년 1월14일)

‘우수 브랜드 인증 경영체’ 26일 탄생

오는 26일 우수 브랜드 인증경영체가 처음으로 탄생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수브랜드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수 브랜드 인증경영체가 발표된다.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는 지난해 농림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우수 브랜드 인증 지침을 마련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주관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를 설치, 희망경영체 신청을 받아 두차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는 앞으로 매년 실시되며 전년도 인증브랜드도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수 브랜드 인증경영체가 선정되면 해당브랜드에 한해 연간 계약형태로 농협, 농협유통, 민간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판매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 1월12일)

NEWS

결핵병·소부루셀라 살처분장려금 현실화

우결핵과 부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준이 종전 정액제에서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과의 차액 지급 형태로 현실화 됐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급요령에 따르면 종전에 우결핵과 소부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에 대

해 마리당 20~50만원을 지급해온 장려금이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10일이후 우결핵 및 부루셀라병으로 도태권고를 받은 소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급기준의 적용을 받게 돼 감염의심소 및 동거소의 신속한 도태가 기대된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1월12일)

올해부터 '가축방역특별포상제' 도입

올해부터 가축방역특별포상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기대된다.

농림부의 2005년 가축방역특별포상제 사업실시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9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가축방역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물론 언론공표 및 정책자금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시상금은 축산발전기금 가축질병근절사업비에서 2억8100만원을 배정,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700만원, 장려상 500만원 등 총 39개소를 선정해 오는 12

월 포상할 방침이다.

정책자금부문도 우수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 조사료·송아지생산기반·축산분뇨처리 등 보조사업을 10~20%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언론공표, 장관표창 축소, 사업 독려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농수축산 2005년 1월7일)

NEWS

일본정부에 가금육 수입 재개 촉구

일본으로의 가금육 수출재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제기준(OIE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밤부터 우리나라 가금육 등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한 일본 정부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내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체규정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중 H5와 H7형이 발생한 나라의 가금육 수입은 금지시키고 있어 수출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가금육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데 결국 미국내 일부 주만 수입을 허용했다”며 “현재 일본정부에 조속한 시일내 수출재개를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마지막 발생후 3개월이 경과되면 가금육 교

역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개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2월까지가 오리고기 성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오리고기 수출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중오리 농장 일제검사과정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저병원성 의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색출 23일 최종판정하고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오리 3농가,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H5N2형은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되고 저병원성인 경우라도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고병원성으로 전환된 사례가 1994년 멕시코, 1997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2004년12월31일)

“정부 폐사축처리 팔건어”

정부가 양축현장의 고민거리인 폐사축처리 대책 마련에 소매를 걷어부쳤다.

농림부는 최근 폐사축처리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산, 학, 관, 연으로 이뤄진 T/F

팀을 구성,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가축방역과 관장하에 이뤄짐으로써 폐사축으로부터 초래될 수

NEWS

있는 각종 질병발생요인 점검과 차단 및 비현실적인 관련제도 발굴을 통한 개선 대책 마련은 물론 폐사축 처리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의 한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농림부내에서도 폐사축 문제는 가축질병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필요할 경우 농가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수립, 2006

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축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일반 폐사축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 양돈 및 양계단지, 중돈 종계장, 나정 착촌에 공동시설할 경우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로 시도지사가 한도를 결정해 보조 30%, 지방비 20%, 용자 50%의 비율로 지원토록 돼있다. 용자조건은 3년거치 7년균분 상환으로 금리는 연 4.0%다.

(축산신문 2005년1월5일)

화인코리아, 화의 농가와 업체 극적합의... 정상화 가닥 잡히나

화의인가와 관련 농가와 합의진통을 겪어온 화인코리아가 지난 7일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 정상화와 11일 현재 구속상태에 있는 나원주 회장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끼오리 입식권 이양 등 경영진에 대한 신뢰문제로 화의를 반대하던 114명의 농가들은 지난 7일 전남 나주 시청에서 입식권을 나주시장에 위임하고 농가채권액의 40%를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화의인가 찬성쪽으로 입장을 선화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날 농가대표와 업체대표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화의 반대농가와 화해를 성사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오늘의 양자간 일괄타결협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화의에 반대해온 박양기 씨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채권금액을 전혀 받지 못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살림이 어려워지는 농가가 속출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NEWS

생각했다”며 “농가도 살길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위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며 먼저 나원주 회장이 석방돼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농협중앙회 특별채권팀을 찾은 전남 보성의 정중우씨도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화의에 찬성했으며 관계기관에 화의인가와 나원주 회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업체와 농가와의 화해를 요구한 농협중앙회에 화인코리아 경매취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측은 “이번 농가합의로 287천 농가가 화의인가에 찬성했다”며 “이

는 농협중앙회의 경매취하와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법원 화의인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인코리아가 주력으로 해 온 오리와 삼계시장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생에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화인코리아의 경영정상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나원주 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 11일 처음 열렸다.

(농수축산신문 2005년1월12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가축 밀집사육지역 이전시 시설비 지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축산정책이 달라진다. 위생과 환경분야가 특히 강화되면서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을 짚어본다.

■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확대

종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백일 기준으로 200ml 백색우유를 공급하던 것에서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만9천명까지 확대해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자도 고

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지원하던 것을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을 제외하되,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을 추진한다.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동 대상 업종 확대

현행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동 대상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집유업,

NEWS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을 확대한다.

■ 조세유류의 과대광고 등 금지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던 것을 조제분유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한다.

■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

HACCP 시행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에서만 하던 것을 식육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를 시행한다.

■ 검사관의 기준업무량 및 자체검사원 검사보조원의 수 세분화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검사관의 축종별로 근무인원에 따라 도축 두수를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 검사관 1인이 소 30두 이하, 돼지 3백두 이하, 닭 2만수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자체검사원의 검사두수도 세분화하여 닭 2만수 이하 도축시 1인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검사보조원의 경우도 축종별 검사두수를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어 소 61두 이상 도축시 3인 이상이 검사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축소되고,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은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며,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는 17종에서 12종으로 줄어든다.

■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 시행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 강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축시장에서 거래 또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하다.

검진증명서를 휴대하지 않게 되면 해당

NEWS

소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고, 소유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받게 된다.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없으면 살 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한다.

■ 부루세라병 감염 의심소 등 도태장려금 현실화

종전에는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 의심소·동거소의 도태가축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50만원의 정액을 지급해 오던 것에서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 도태장려금을 현실화한다.

■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가금질병이 제외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권을 받고 도계장으로 출하한 종계, 즉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 결과 양성종계군 동거 종계에 대해 수당 5천원 도태장려금을 지급한다.

■ 가축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농가가 타지역 이전시 친환경축사 시설비, 기반조성비, 기존축사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축사설시(용자), 기반정비 및 철

거비(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별도 제정, 시행된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관리지역내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취관리지역밖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규제를 완화하여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명령이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정 농협법 시행

중앙회장의 비상임화와 부문별 대표이사 임기 2년으로 단축되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중앙회의 감사제도는 은행법처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무이사제가 도입되며 집행간부 임면권을 대표이사가 하게 된다.

(축산신문 2005년1월5일)